

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(10.27) 모두말씀

1. 가계부채 동향

□ 금년 들어 정부 대책의 시행효과,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적인 모습

○ 금년 1~9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(금감원 기준)가 '16년 뿐만 아니라 '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많이 감소

* 가계대출 증가규모(1~9월, 조원) :('15) +73.3, ('16) +84.9, ('17) +64.6

* 10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(금감원 속보치)

→ 10.1~20일 은행 가계대출 증가규모: ('16) +4.8조원 ('17) +3.6조원

□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 되지 않도록,

○ 안정적인 부채관리와 함께, 가계의 상환능력 제고, 증가원인에 대한 구조적 대응 등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10.24일 마련하였고,

○ 앞으로 관계부처, 금융권과 함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여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

2. 최근 가계대출 금리 상승 관련

□ 최근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

○ 주요 선진국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함에 따라 본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 국면에 접어들었고, 이에 따라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는 점임

- 실제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*가 11~16bp 상승하는 등 차주의 상환부담 확대가 일부 현실화

*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(5년 고정혼합형 기준) 최고 고시금리 기준 (실제 대출금리는 우대금리 등 감안시 낮아질 수 있음)

□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

-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채권시장에 선(先)반영 되면서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국고채·금융채 금리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크게 오른 데 기인한 측면이 있음

* 국고채 금리(3y) : (9말) 1.89%, (10.18) 1.94%, (10.25) 2.09% [18일 대비 +15bp]
금융채 금리(5y) : (9말) 2.31%, (10.18) 2.37%, (10.25) 2.58% [18일 대비 +21bp]

* 10.19일 금통위 금리동결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닌 것이 언론에 보도

□ 하지만, 과거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손쉽게 대응하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고,

- 가산금리 산정방식·수준에 대한 고객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

- 또한, 금리 상승기에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 대출을 권유하거나,

- 간절하게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끼워 팔기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

□ 일부 금융회사의 이러한 구태는

- 국민의 소중한 돈으로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,

- 금융업의 신뢰 기반 자체를 훼손하여 다른 금융회사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행태임

3. 당부사항

- 앞으로 정부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격결정과 영업방식은 최대한 존중하되,
 -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않은 가격결정 방식, 불공정한 영업 행태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예외없이 엄단하겠음
- 금융권도 관행적으로 해 오던 불합리한 영업관행은 없는지 점검하고 스스로 개선 노력을 다 해 주길 당부드림
 - 금융권이 사회적인 요구 수준을 계속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결국 외부적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함을 유념
-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당부 드리고자 함

1. 금리상승기 고객에게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 확대

- 은행 직원들이 상담과정에서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까지 관리
- 금감원은 창구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과도한 축소가 발생하지 않는 지 점검을 강화
- 향후 필요시 고정금리 대출비중 목표를 상향 검토

2.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은 자제하고, 고객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강화

-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지난 4월 마련한 대출금리체계 모범 기준을 차질없이 이행
 -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, 고객에게 산정 사유,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명하게 공시

- 금감원은 금융권 검사시 대출금리체계 모범기준을 반영한 내규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,
 -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

3. 대출 과정에서 불공정한 영업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

- 대출 과정에서 취약차주에 대해 구속성 예금, 카드 판매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까지 철저히 관리
- 만약 적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 조치

◆ 정부는 금리상승 국면에서 서민·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*을 강화해 나갈 계획

*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('17년 7조원), 법상 최고금리 인하, 취약차주 사전 연체 방지방안(실직·폐업 등의 경우 최대 3년 상환 유예), 연체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적 개편 등

◆ 금융권도 어려움이 있겠지만, 고객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